



October 23, 2019

Legal Update

Policy and Law Report

- 정부 주요정책 및 입법정보 동향 (2019. 10. 17. ~ 10. 22.) -

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 입법규제감사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금주에는 국정감사 종료 후 착수된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처별 예산안 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 일정을 감안하여 “정부 예산안 및 정부지원사업 컨설팅 안내”를 조속히 드리오니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공정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규정 개정·시행

2019. 10. 22.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정안이 시행됨. 주된 개정 내용으로는 ① 법 위반 이력 사업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등급평가 신청 제한 규정 삭제, ② 현행 평가 절차 및 등급 체계 개편, ③ 등급평가 우수 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인센티브 부여 등이 있음

[\[참고자료\] CP 운영규정 개정시행](#)



[금융위] 데이터 표준 API 2차 워킹그룹 출범 및 데이터 업계 간담회 개최

2019. 10. 16. 신용정보법 개정 및 시행에 대비하여 데이터 표준 API 2차 워킹그룹을 출범하고 데이터 업계 간담회를 개최함. 논의 내용으로는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가이드라인 등 하위규정 제정을 위해 ① 금융회사 등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 ② 금융회사 등 정보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기술적 여건 마련, ③ 데이터 표준화, API 구축 등 빅데이터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 구체화 등

[\[참고자료\] 데이터 표준 API 2차 워킹그룹 킥오프 및 마이데이터 활성화 간담회 보도자료](#)



[문체부] 만화산업 발전 계획 발표

2019. 10. 17.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의 일환으로서 ① 인프라 구축[‘웹툰융합센터’ 구축(’19. 12. 착공), ‘웹툰 캠퍼스’ 및 ‘웹툰창작체험관 확대’ 등], ② 신시장 확대[해외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등], ③ 공정환경 조성[불법유통 사이트 단속 및 범죄수익 환수 등] 등을 주요 골자로 함

[\[참고자료\] 문체부 보도자료 만화산업 발전 계획 발표](#)



[\[참고자료\] 만화산업 발전 계획](#)



[과기부]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

자율주행차에 이은 2번째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으로, 드론 산업의 종합적인 로드맵 발표는 세계 최초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비행기술(조종→자율), 수송능력(화물탑재→사람탑승), 비행영역(인구희박→밀집지역) 등 3가지 기술 변수를 종합한 5단계 시나리오 도출, ② 드론전용구역 단계적 구축, ③ 안티드론 도입, ④ 비행 특례 확대 등

[\[참고자료\] 드론규제 미리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개선합니다](#)



[\[참고자료\]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산업부·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관련 행정규칙 3건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19. 10. 23.부터 2019. 11. 12.까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을 행정예고함. 개정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별 공익사업의 근거 법률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여 중복 행정절차 간소화, ② 훼손지 정비 활성화, ③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권자인 사업 중 입안권자가 다른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는 등

[\[참고자료\] 개발제한구역 중복 행정절차는 간소하게 규칙은 명확하게](#)



[\[참고자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참고자료\]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참고자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주요 입법(안) 동향 *해당 의안명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5인\)\]](#)

최근 헌법재판소는 업무상 재해에 통상의 출퇴근재해를 포함하도록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법 시행 이후부터 발생하는 출퇴근재해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기존 제도에서 배제된 집단이 받는 중대한 불이익이 이미 확인된 이상 추가지출의 예상만으로 차별취급의 합리성을 인정해서는 안되고 신법조항을 소급적용함으로써 산재보험에 미치는 재정상 부담과 그로써 회복할 수 있는 합헌적 이익 즉, 근로자 보상이 충분히 고려해 판단돼야 한다는 취지), ‘적어도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2016년 9월 29일 이후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 신법 조항을 소급적용 하도록 해야한다’고 판시한 바, 출퇴근재해 시행일을 2016년 9월 29일 이후의 재해부터 소급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안 부칙 제2조)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의원 등 12인\)\]](#)

현행법상 디자인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이 침해되면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침해자의 이익액을 디자인권자의 손해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손해액 산정방식은 추정규정에 불과함. 이에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디자인권자의 생산능력과 상관없이 디자인권자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입증책임의 범위를 적정하게 분배하는 한편, 침해자가 보유한 증거에 대하여 제출명령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법원의 증거제출명령에 대한 불응시 제재효 도입을 통해 제출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디자인권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 같은 취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의원 등 12인\)\]](#)

3. 정부 예산안 및 정부지원사업 컨설팅 안내

정부가 513조 5천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이는 총지출 기준 전년도 대비 9.3% 증가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특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 예산은 올해보다 27.5% 증가한 23조 9천억 원, 연구·개발(R&D) 예산은 24조 1천억 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2조 3천억 원 등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2019. 10. 2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였고, 각 상임위원회도 국정감사 종료 후 본격적인 소관 부처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여 2019. 12. 2.까지 예산안이 처리될 예정에 있습니다(헌법 제54조 제2항 참조), 저희 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은 오랜 기간에 걸쳐 정부 예산안 집행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한 축적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하기의 일정을 참고하시어 관련된 여러 의문점들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되는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일정 등은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2020년도 예산안 공청회 자료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일정]

10월 22일	정부 시정연설
10월 22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공청회
10월 28일 ~ 10월 29일	종합정책 질의
10월 30일 · 11월 4일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11월 5일 · 11월 6일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11월 11일	예결위 소위원회 증액 감액 심사 시작
11월 29일	예결위 전체회의 및 예산안 의결
12월 2일	국회 본회의 및 2020년도 예산안 의결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일정]

구분	복지위	행안위	과방위	교육위	환노위	국토위
예산안 상정	10월 31일	10월 29일	11월 1일	11월 8일	10월 29일	10월 28일
예산심사	11월 6일	11월 4일	11월 5일	11월 12일	10월 30일	10월 30일
	11월 7일	11월 5일	11월 6일		10월 31일	
	11월 11일	11월 7일	11월 7일	11월 13일	10월 31일	
예산안 의결	11월 12일	11월 8일	11월 8일	11월 15일	11월 7일	10월 31일

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실용적인 대관업무 전문팀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PA팀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수의 정부 부처 및 국회 출신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대관 및 PR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PA팀은 법적 자문 및 이에 수반된 다양한 정책적 자문에 대한 고객들의 요청을 종합적·전략적·실용적으로 처리해 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s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 02-316-4630
✉ dybaek@shinkim.com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 02-316-4432
✉ sbkim@shinkim.com



홍정아
외국변호사

☎ 02-316-4487
✉ cahong@shinkim.com



방세희
소속변호사

☎ 02-316-1773
✉ shbang@shinkim.com



노지은
소속변호사

☎ 02-316-2573
✉ jeroh@shinkim.com

SHIN&KIM |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